

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수출 · 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 -

2024. 1. 31.



산업통상자원부

순서

| | |
|---|----|
| I . 2023년 추진성과와 평가 | 1 |
| II .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| 2 |
| III . 2024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 | 4 |
| 1. 역대 최고 수출 달성: 수출이 민생이다 | 4 |
| 2.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: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| 7 |
| 3.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: 국민과 기업의 보루 | 11 |
| 4.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: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| 15 |
| 5.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: 구석구석 온기 도는 지방시대 | 19 |
| 6.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: 국민의 불편을 바로 해소 | 21 |

I. 2023년 추진성과와 평가

- 「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」을 필두로 수출 흑자 전환 및 최대 외투 실적 달성
 - 20개월만에 수출 플러스 및 월별 무역수지 흑자 전환 동시 달성, 고부가 차량 수출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 최고치 기록
 - 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경신(327억불)
 - 정상 외교로 미·영 등과 전략적 첨단산업·공급망 협력관계 구축, 중동 Big 3 국가와는 853억불 경제성과 창출

- 전략적 산업·통상정책으로 공급망, 첨단산업 등 경제안보 강화
 -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,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 확정
 - 美 IRA, 반도체법, 中 반도체 장비 반입 승인(VEU)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美 전기차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기회 창출
 - 4년 만에 韓-日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고, 요소·흑연 등 중국發 공급망 불안에 신속 대응
 - 중동 6개국과 한-GCC FTA 협상 최종 타결('23.12)

- 원전 활용확대 등 안정적 원전 생태계 복원과 에너지 복지 확대
 - 신한울 3·4호기 건설(총사업비 11.7조원) 재개 등 원전 정책 정상화
 - 취약계층 대상 최대 59.2만원 난방비 지원(중전 가스 14.4만원, 열 4만원)
 - 세계 최초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

△ 글로벌 복합위기 심화로 우리 기업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

△ 에너지 공기업 경영 정상화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은 추가 과제

Ⅱ.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 추진 여건

□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물경제 여건

- (단기) 미국^發 고금리 지속, 고물가, 가계·기업 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와 기업 투자 동시 위축 우려
 - 단, 수출은 올해 반도체 세계 수요 증가·단가 상승, 자동차·선박 등의 증가세 유지 등 여건 개선으로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
- (장기) 생산 가능인구 감소, 노동 생산성 하락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정체*되며 저성장이 지속될 우려
 - * 저출산·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계속 하락, '23년 1.9%, '24년 1.7%(OECD)

□ 공급망,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

- 미·중 경쟁으로 경제 블록화 가속, EU CBAM 등 무역장벽 확대로 자국 우선주의 下 공급망 재편 지속
- 러·우 전쟁,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, 美 대선 포함 전세계 70여개국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
 - * 인도('24.5), 유럽의회('24.6), 미국('24.11) 등 24년은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선거가 있는 해

□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확대

- 글로벌 안보위기로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될 전망으로, 탈화석연료 및 청정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대한 요구 증가
- 글로벌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수소 공급망 선점 경쟁 심화

⇒ 윤석열 정부 중간 반환점(3년차)를 맞아 민생 안정,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본격화 필요

2 업무 추진 방향

2024 비전

수출 · 투자로 민생 경제 활력 회복

목표

- ◇ 수출 7,000억불, 외국인투자 350억불
- ◇ 첨단산업 중심으로 민간 투자 150조원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역대 최고 수출 달성 | 수출 우상향 추세 가속화 | 수출 전략 품목·시장 육성, FTA 확충 |
| | 수출 기업에 대한 역대급 지원 | 수출 3대 애로 해소, 성장사다리 구축 |
| | 정상 경제외교의 효과 극대화 | MOU 등 조기성과 창출, 기획·홍보 강화 |
|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| 첨단산업 글로벌 투자 허브 | 입지·인력·세제 지원, 외투·유턴 확대 |
| | 국가첨단전략산업(4+α) 생태계 조성 | 반도체·이차전지 등 혁신 생태계 조성 |
| |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 | 「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」 수립 |
| | 차세대 기술 집중투자 및 혁신성과 창출 | 도전적·혁신적 R&D 지원, 인력 양성 |
|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| ‘산업 공급망 3050’ 본격 추진 | 기술개발, 다변화, 비축 확대 |
| | 에너지·자원 국내 수급 관리 철저 | 석유·가스 수급 관리, 자원개발 투자 촉진 |
| |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 | 자국우선주의 대응, 통상 네트워크 확대 |
| |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| 무역 기술 안보 강화, 통상 조직 강화 |
|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|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| CFE 이행기준 마련, CF 연합 확산 |
| | 무탄소 에너지 원별 공급 역량 강화 | 원전·재생·수소 공급역량 확대 |
| |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망 확충 | 11차 전기본 수립, 원별 시장제도 신설 |
| |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에너지 복지 강화 | 제도·전달체계 개편, 사각지대 최소화 |
| 지역 경제 및 투자 활성화 | 지방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| 기회발전특구 지정, 지역 미래전략산업 육성 |
| | 지역 산업단지 혁신 가속화 | 킬러규제 개선, 문화·편의·주거시설 확대 |
| 국민 체감형 업무 혁신 | 관행적 불공정·불합리 해소 | 재생e 특혜 제거, 안전인증기관 확대 |
| | 부처간 협업과제 확대 | 범정부 수출 지원, 방산, 전문인력 양성 |
| | 「현장 산업부」 | 산업투자전략회의, 통상법무 카리반 신설 |

Ⅲ. 핵심 추진과제

1 역대 최고 수출 달성 : 수출이 민생이다

① 수출 우상향 추세 가속화

◇ 수출 7,000억불 달성을 위한 숨은 1인치 발굴·맞춤형 지원

□ 타겟 시장별 新성장동력 수출 지원

-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(공급망, 디지털, 탄소중립, 인구구조)에 맞춰 30대 전략 품목, 10대 전략 시장 선정

* 매년 4대 부문 기준으로 시장 수요, 트렌드를 반영하여 품목 추가·변경

【 전략품목 및 전략시장(예시) 】

| 트렌드 | 전략 품목 | 타겟 시장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공급망 | 반도체 고성능메모리(HBM 등), AI용 시스템반도체 등 자동차 전기차, 배터리 양극재 | 북미, 유럽, 아세안 |
| 디지털 | 통신 카메라모듈, 디스플레이 차량용/투명 OLED | 일본, 아세안 |
| 탄소중립 | 철강 친환경에너지용 강재, 조선 친환경선박, 에너지 원전, 태양광 모듈, 인버터, 풍력타워, 수소연료전지 | 유럽, 중동 |
| 인구구조 | 바이오 바이오시밀러, 임플란트, 초음파영상진단기, | 중국, 아세안, 인도, 아프리카 |

- (북미)전기차·반도체 중심 GP* 활용, (유럽)배터리 공급망 대응 GP 신설, (중국)프리미엄 소비재·친환경 시장 진출, (아세안)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

* GP(Global Partnering) 센터 : 기업별 맞춤형 수주 지원을 통해 현지시장 진출 지원

□ 전세계 GDP 85 → 90%로 우리나라 '경제영토'(現 2위) 지속 확대

- 말레이시아 등과 신규 FTA 체결 및 영국 등과 FTA 고도화* 추진

* 영국, 칠레(규범·경제협력 강화), 인도(자유화 확대)

- 인태시장 확보를 위해 IPEF 활용 및 CPTPP 가입여건 조성

*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한 14개국 간 핵심품목 협력체계 및 위기대응네트워크 구축 등

- 베트남 등과 탄소 국제감축 협력 가속화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*

* 투자 지원 확대('23, 60 → '24, 330억원) 및 타당성 조사 신규 지원('24, 20억원) 등

- 공급망·그린·기술 시장 확대 기회로 ODA 활용('23, 645→'24, 907억원)

2 수출 기업에 대한 역대급 지원

◇ 금융·마케팅·인증 등 3대 애로 해소 및 수출 성장 사다리 구축

□ 수출 기업 3대 애로 지원 강화

① 금융 :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

- 무역보험 공급 확대('24, 250조원), 시중은행·무보 자금을 활용한 2.2조원 규모 패키지 우대상품* 신설('24.1분기)

* (5대 시중은행) 기금출연, 저금리 상품 제공 + (무보) 보증·보험료 할인, 한도 상향

- 방산·원전·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지원 강화

*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보험 체결한도 상향('24, 20조원), 프로젝트 협력사 보증 지원 강화(방산 → 원전, 이차전지 등 추가)

- 수출 중소·중견에 필요한 단기보험·신용보증료 50% 일괄 할인, 환변동보험 한도 50% 확대*

* (현재) 수출실적의 100%(정상등급)/60%(제한등급) → (확대) 150%/100%

② 마케팅 : 수출 원팀으로 현지 마케팅 강화

- 수출 바우처 약 2배 확대('24, 311억원), 인도·ASEAN·중동 등 수출 유망국 10개국 무역사절단* 파견

* 인도, ASEAN, 중동 등 시장 특성 및 주요 품목 경쟁력을 고려하여 10개국 선정

- CES 등 유명 전시회에 통합한국관 확대(150회), 유망시장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(3,200개사), 한류 박람회 확대 개최(3회)

③ 인증 : 신속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

- 친환경·고기술* 신분야, 중남미 등 신시장의 상호인정 품목 확대

* 전기차 충전기·생분해 플라스틱 등 추가 / 방폭 시험장비 구축 ('24년)

-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국내 시험비용 인하*(최대 20%) 연장

* 신수출동력 분야 등 수출 시급 기업 우선 지원 : (現) '24.3월 → (改) '24.6월

□ 수출기업 유형별 성장 지원

- ① 청년 및 1인 기업 : 디지털·청년 무역인력 1,800명 이상 육성, 수출기업·상품 정보 디지털 콘텐츠 2배 확대('24년 4만건)
- ② 테크기업 :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력·매칭을 위한 거점센터 신설*, 16개 스타트업 거점 무역관 운영
 - * Global K-Tech Camp: 실리콘밸리('23.12) 외 파리, 싱가포르, 도쿄 등으로 확대하여 창업공간 제공, 마케팅, 투자유치·진출, 인재유치 등 종합 지원 제공
- ③ 내수·초보기업 : 전문무역상사 중심으로 초보 맞춤형 컨설팅 지원*, 전시·상담회·온라인을 종합 활용**한 해외마케팅 강화
 - * 내수, 수출중단, 수출초보 등 수출 이력을 고려하여 컨설팅 차별화 ('24년 5,500개사)
 - ** (전시·상담 전용관)수출 첫 걸음관(800개사), (온라인)B2B 플랫폼 입점·마케팅 지원(500개사)
- ④ 중견기업 : 「中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*」을 통한 내수 중견의 수출 기업화** 촉진
 - * 산업부·유관기관(17개) 합동, 컨설팅·금융·인증·물류 등 수출 쏠주기 밀착 지원 ('24.2월 발족)
 - ** 매년 수출 중견 40개 발굴(~'28, 200개) 및 중견 수출비중 20%('24) 달성('23.1~'3Q, 18.8%) 목표

③ 정상 경제외교의 효과 극대화

◇ 사전 기획에서 체계적 관리까지 조기성과 창출형으로 업그레이드

□ 국가별 정상 경제외교 실질적 성과이행 촉진

- 국가별 이행점검 플랫폼을 지정*하여 민간 MOU(385건), 투자유치 (65.8억불) 성과 이행 점검
 - * 예 : (미) 정상 성과이행 민관TF, (중동) 경제협력 민관추진위, (베트남) 베트남-코리아 플러스

□ 전략적 세일즈 외교 기획 및 성과 확산

- 산업부·대한상의·무협·한경협·코트라로 구성된 민관 합동 '세일즈 외교 지원단(단장: 통상차관보)' 신설*로 기획·홍보 강화
 - * 경제사절단 기업 구성, 현지 경제행사 개최, MOU·투자 계약, 후속 이행 등 순방 쏠 단계에 걸쳐 메시지 관리, 성과 사업 발굴, 성과 사업(사례) 기획 홍보 등
- 경제외교 포털(코트라)을 전면 개편하여 정상외교 성과 관리 플랫폼화

2 첨단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 :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

1 첨단산업 글로벌 투자 허브

◇ 첨단산업 중심 15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실현

□ 범부처 지원으로 첨단산업 중심 민간투자 150조원 달성(외투 포함)

- 인프라 : 첨단 특화단지 신속 조성을 위해 전력·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(~'24년 1,392억원), R&D 강화 등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
- 인력 : 특성화대학원 확대*, 한미 청년교류 지원으로 국내 청년인재 양성하고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체계(KOTRA) 마련
 - * 특성화대학원 : ('23) 반도체 3개 → ('24) 반도체·배터리 3개, 디플·바이오 1개 추가
- 금융지원·세제 : 정책금융 확대*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('24년말 일몰) 연장하여 기업의 자금확보와 투자 부담 경감
 - * '23년 13조원 → '24년 14.7조원(대출 11.5조원, 보증 3.2조원)
- 규제 : 첨단산업 규제 지속 효과를 위해 3대 규제혁신 제도를 마련
 - * ①킬러규제개선 프로세스 운영, ②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, ③규제영향분석 도입 검토

□ 첨단기술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및 유턴 확대

- 첨단기술 확보 : 국내 수요에 기반하여 100대 핵심기업 선정
 - 첨단 외투 인센티브 강화(투자액의 최대 50% 지원), 외투기업 전용 R&D 사업 신설(15억원) 및 석·박사 R&D 인력 채용 지원
 - * 온라인채용플랫폼,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소재 외투기업 맞춤형 인재 매칭
 - 첨단기술 유턴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 확대*, 인정요건 완화**
 - * 수도권 150억원, 비수도권 300억원 → 수도권 200억원, 비수도권 400억원
 - **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, 투자완료시까지 해외투자제한 요건 폐지 등
- 공급망 강화 : 아태 공급망 거점화 위한 외투·유턴 촉진
 -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* 적극 유치 및 공급망 연관 기업 간 동반·협력형** 유턴시 입지 요건 완화, 보조금 지원 우대 검토 등
 - * 지역본부 입지에 대해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임대료 지원
 - ** (동반) 공급망 내 2개 이상, (협력형)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 복귀

② 국가첨단전략산업 (4+α) 생태계 조성

◇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초격차 유지 및 추가 후보 발굴

□ 반도체 :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

-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금년부터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본격 구축, 팹리스 쉘 밸류체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('24.上)
- 첨단 패키징(예타착수, 5.5천억원), 첨단반도체 미니팹(예타착수, 9천억원) 등 미래시장 선점 위한 대규모 R&D 추진
- 향후 3년간('24~'26) 24조원 규모의 대출·보증 우대 지원을 통해 팹리스·소부장의 스케일업 및 자립화 촉진

□ 이차전지 : 핵심 원자재 공급망 자립화와 창의·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

-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광물확보 프로젝트 지속 발굴,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한 전방위 지원 및 5.9조원 정책금융 공급
- 안전^高전고체, 무^低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본격 개발('24~'28, 1,172억원)

□ 디스플레이 : OLED 확산 및 차세대 기술 투자 개시로 초격차 공고화

- 기술 고도화 및 실증 지원(여의도역 투명 OLED, '24.上) 등으로 OLED 확산
- 차세대 무기발광 대규모 R&D로 시장 선점('24~'26, 352억 + 예타 9,500억)

□ 바이오 : 민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

-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('24.上)을 통해 전략 거점 육성
-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확대(예타추진, 약 5,000억원) 및 바이오 소부장 사업화 지원 등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

□ 미래차, 차세대 방산, 첨단 로봇 등 새로운 첨단동력 지속 확보

- 연내 기술, 산업 지정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정 검토

3 **AI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와 제조공정 혁신**

◇ 「AI 자율 제조*」 실현을 위해 제조공정 및 생산시스템 혁신 추진

* 공정혁신(장비 혁신 + 제조 AI 융합) + 생산시스템 혁신 → 제조업 자율화

□ **주력 제조업 중심으로 「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」 수립(24.上)**

- 「자율 제조 변혁지도」를 통해 제조업 자율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AI, SW, 기계·장비 간 융합 등을 위한 **쏘 제조공정 분석 추진**
- 「AI 자율 제조 기술로드맵」을 수립하여 AI, SW, 기계·장비 등 3대 분야 고도화를 위한 **핵심기술* 식별 및 기술개발 추진****

* ▲AI 인지·제어, ▲SW 기술, ▲AI 자율 제조 데이터 표준, ▲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

** AI 자율 제조 핵심기술 R&D 예비타당성조사 추진(24.下)

□ **부처 간 협업을 토대로 「AI 자율 제조」 시범 프로젝트 추진**

- 지역별 1~2개 업종 대상 시범 프로젝트*를 추진(24.上)하고 국내 제조업 특성에 맞는 기계·장비 도입, AI·SW 솔루션 개발 등 추진

* 예) 반도체용인, 천안, 대전, 자동차천안, 홍성, 광주, 대구, 방산창원 등(국가 첨단산단 지정, '23.3월)

- 산업부*뿐 아니라 과기부(AI, SW 기술 확보), 중기부(스마트공장 등)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여 「AI 자율 제조」 실현을 위한 **혁신 가속화**

* (로봇) 보급(708억 원), 기술개발(1,230억 원), (기계·장비) 보급(82억 원), 기술개발(1,614억 원) 등

□ 「AI 자율 제조」 도입 확산을 위해 선제적 제도·인프라 정비

- 「AI 자율 제조」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기술개발, 인력양성, 금융 지원, 규제혁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**법적 근거 마련(24.下)**

- 민·관, 범부처 협업을 위해 「AI 자율 제조 추진단*(가칭)」 구성·가동

* (주요 기능) ▲기술개발, ▲보조금, ▲인력양성 등 공동 기획 및 사업 연계·협력 추진

4 차세대 기술 집중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

◇ R&D 혁신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청년 연구자 성장기반 조성

□ 세계 최고·최초 성과를 위한 도전적·혁신적 R&D 지원

- 첨단산업·소부장·국제협력 등에 산업R&D('24, 5.1조원) 집중 지원
 - * '24년 예산(조원) : 첨단산업 1.1(6%↑), 소부장 1.7(3%↑), 국제협력 0.3(21%↑)
- 11대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 예산 70%를 배정하여 민관합동 2조원 투자, 파급효과가 큰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('24 예타신청)
-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력으로 180개 초격차 급소기술·산업원천기술 확보
 - * MIT, 스탠포드 등 6개 협력센터 구축 / ('24) 2,062억원 → (~'30) 약 1.9조원 투입 목표
- 기업이 주도하는 성과창출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(R&D 혁신방안, 1.18)
 - * 정부는 품목만 지정하고 기업이 개발계획 수립, 주관기업의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등

□ 민간 부문의 첨단산업 등에 대한 R&D 투자 유인 강화

- CVC 펀드 확충을 통해 대·중견기업의 딥테크 연구자·벤처 투자 촉진
 - * ('23) 1.4조원 → ('24) 민관 합동 총 2.4조원 조성 목표
- 중소·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초저금리 융자형 R&D 신설(5,400억원)
 - * (융자) : 900억원, 금리(변동) 1.84%, (이자보전) : 4,500억원 규모, 시중금리 5.5%p 보전
- 대기업·공공연의 우수기술 이전 확대*,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신설 등 첨단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강화
 - * 나눔기관 : ('23) 23 → ('24) 28개社 / 이전 건수 : ('23) 388건 (260개社) → ('24) 540건 (370개社)

□ 첨단산업 인력수혈 확대 및 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

- 첨단산업 석박사 전문인력* 및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** 확대
 - * (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) 1,575억원(16%↑), (민관공동투자반도체인력양성) 120억원(19%↑)
 - ** 반도체아카데미 : ('23) 23억원 → ('24) 43억원(85.2%↑) / 배터리아카데미 : ('24 신규) 57억원
- (석·박사생) 연구몰입 환경 조성*, (신진연구자) R&D 프로세스 참여 확대, (공공연구자) 기술창업 활성화** 등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 마련
 - * 사용증빙 간소화, 행정부담 개선 / ** 휴·겸직, 주식취득, 장비·기술 이용 전면 허용

3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: 국민과 기업의 보루

① '산업 공급망 3050('23.12월)' 본격 추진

◇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'22년 70% → '30년 50% 이하 달성

□ 공급망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

- 공급망 안정품목 R&D 4배 이상 확대('23년 176억원 → '24년 739억원),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공급망 안정품목 자립화 기술개발도 착수*
* 이차전지 소재, 전기전자 핵심부품, 희소금속 재자원화 등 29개 품목
- R&D와 생산시설 구축 신속 연계를 위해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*에 신규 지원('24년 3개 과제(60억원) 지원)
* 기존 1개 품목 지원에서 밸류체인 상 연계된 복수의 품목을 동시 지원

□ 다변화, 비축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

- 10개 이상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*하고 수입보험 지원 등 다양한 대체수입 인센티브** 도입
* 대체처 발굴 및 현장 실사 →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→ 대체품 도입까지 전주기 지원
** 수입보험 지원대상 확대(공급망 안정품목 포함) 및 중소·중견기업 한도 우대(1.5배)
- 리튬(5.8→30일분), 영구자석용 희토류(6개월→1년6개월분)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비축 대폭 확대 및 신규 専用 비축기지* 구축 착수(설계 등)
* 위치 : 새만금산단 / 건설기간 : '24~'26년 / 사업비 : 2,417억원

□ 소부장 특화단지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거점으로 육성

- R&D(135억원), 테스트베드 구축(240억원), 인력양성(15억원) 등에 총 390억원(국비 기준)을 투입
- 지자체·기업 수요*를 반영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육성계획 수립('24.上)
* 예) 부산 8인치 전력반도체 인프라 조성, 대구 모빌리티 모터 자립화율 제고, 오송 배지 등 바이오소부장 핵심부품 국산화 등

2 에너지·자원 국내 수급 관리 철저

◇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석유·가스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

□ 석유, 가스 등 필수 에너지·자원 보유 확대

- 석유 : 국제 공동비축사업* 확대로 글로벌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,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 바이오 항공유·선박유 조기 상용화** 추진

* 現 공동비축 계약물량 1,968만B(아람코 530만B, ADNOC 400만B 등), 약 26일 지속가능(IEA 기준)

** 실증사업, 품질기준 마련, 인센티브 확대, RFS(의무혼합 비율) 상향 등

- 가스 : '제1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' 수립('24.下), 읍·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*으로 19개 마을 지역의 연료비 절감 지원

* '24년 신규사업(341억원), 기존 LPG 용기 사용 대비 약 43% 연료비 절감

□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확대

- 금융·세제 지원*을 확대하고, 자원부국과의 자원외교 강화 및 글로벌 다자협력체**에 적극 참여

* 용자 : '24년부터 용자 지원비율 30% → 50%, 감면율 상향

세제 : 해외자원개발 광업권 취득 투자 세액공제 시행('24.1~),

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기술의 신성장 원천 기술 지정('24.2~)

**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, 국제에너지기구(IEA) 등

- 자원개발 고도화 R&D 사업('24년 예타 착수)으로 자원개발 생태계 조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

* 기술개발 : 핵심광물 맞춤형 확보기술, 화석연료 관련 저탄소·친환경화 기술 등

□ 자원안보특별법 시행('25년)에 대비한 자원안보 위기 대응역량 구축

- 석유·가스·광물 등 핵심자원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,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자원안보체계 구축 추진

* 25년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자원안보협의회 구성, 핵심자원 선정 등 추진

3 경제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 전개

◇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조치에 선제적·다층적 대응체계 가동

□ 주요국의 산업정책 대응, 수출 통상현안 관리 및 협력체계 공고화

양자 :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 공급망 안정화

- 美 : 장관급 정례채널(SCCD 등)을 통한 IRA 잔여 쟁점* 해소 추진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** 지속 추진

* ①IRA 해외우려기관(FEOC), ②FTA 체결국 범위 확대 등 협의
③인니^{니켈} 등 광물 확보(광산 탐사·개발 용자,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등)

** 한-미 공급망 산업대화(SCCD, 장관급) : '22.5월 발족, '23.4월 1차회의 개최

- EU : 공급망·첨단산업 육성(반도체법, 배터리법 등), 기후·환경(CBAM 등) 등 포괄적 산업정책·경제법안에 체계적으로 대응

* 한-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(SCIPD, 차관급) : '23.6월 발족, 12월 1차 회의 개최

- 中 : 원자재·부품 등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채널 활성화*, 현지 진출기업 경영 지원 및 한중 FTA 업그레이드 모색

* 한중 투자협력위(중상무부), 산업장관회의(중공신부), 지방정부(산둥·장쑤·광둥) 협력 등

- 日 :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* 및 보호무역조치 공동대응, 디지털 통상·기후변화 등 新통상 아젠다 협력 확대**

* ▲기술협력, ▲인력교류, ▲제3국 공동진출, ▲핵심광물·에너지 수급 협력 등

** ▲디지털전환, ▲수소, LNG, 에너지기술·효율, 무탄소에너지, ▲무역안보

다자 : 다자 협력 활성화 및 국제적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 주의에 대응

- '24.上 제1차 한·미·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국간 협력 제도화 (연례 개최 합의 등), 첨단산업·경제안보 협력 합의(공동선언문)

* 3국 산업장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한 한미일 첨단산업·경제안보 협력 강화 추진

- 미국, EU와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표준*·기술규제** 협력 강화

* 국표원-미 NIST MOU 체결('24.1분기), 제 4차 한-미/한-독 표준협력대화 개최('24.12)

** 인도, 중동 등 新시장 기술규제 협력, "무역기술장벽 글로벌 포럼" 개최('24.4분기)

- 한·일·중 정상회의, 경제통상 장관회의, 한-아세안 정상회의 등을 통해 동북아·아세안 공급망·교역관계 안정화 및 신산업 협력 강화

- 제13차 WTO 각료회의('24.2월) 성과 창출(분쟁해결제도 개혁 등), 2025 APEC 성공적 개최 준비 등 핵심중견국가로서 다자무역 복원

□ 공급망, 첨단기술 관련 국제 경제·통상 네트워크 확대

- 광물·자원, 시장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아프리카, 동남아, 동유럽 거점국 중심으로 유연한 형태의 EPA* 10개 추진

* 경제동반자협정(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

- 중앙아, 중남미 등과 공급망, 투자 협력을 위한 TIPF* 40개 확산

*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)

- 싱가포르 등과 경제안보·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新통상협정* 추진

* 기술-통상협정(Technology-Trade Framework Agreement)

□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신속·효과적으로 산업피해 구제

-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, 산업피해 구제조치 수준 강화* 등 제도 개선 및 잠정조치(잠정 덤핑방지관세 등) 적극 시행

* 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3년 → 5년 정착, ② 산업피해구제율 산정방식 개선 등

4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

◇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

□ 첨단산업의 수문장으로서 무역기술 안보 강화

- 「무역·기술 안보 전략」을 수립하고, 전략물자관리원 확충* 및 수출통제 이행팀 신설 등 지원체계 강화

*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, '무역안보관리원'으로 명칭 변경 및 정책수립 지원 등 기능 강화

- 「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관리 체계 정비

* 징벌적 손해 한도 상향,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, 해외인수합병 심사 강화 등

- 첨단산업(국가첨단전략기술) 전문인력 지정, '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대책' 수립('24.2분기)

- 주요국과의 양자 수출통제 채널을 확대하고, 바세나르, 민감기술 다자협의체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

□ 경제안보 및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통상 조직 강화 검토

- 신통상 이슈(공급망·디지털 등), 첨단산업, 수출통제, 기술보호 등 무역·경제안보 핵심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 확보

4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: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

1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

◇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고 외연을 확장

□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우리측 CFE 이행기준(안) 마련

- 국내 제조기업들이 효과적으로 CFE를 이행할 수 있도록,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원, 조달수단, 정산방법 등 이행기준(안) 마련
- 업종별·기업규모별 우리 기업의 여건을 적극 고려하도록 업계·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선제적 과제 발굴 → 이행기준(안)에 반영

□ 우리측 이행기준(안) 바탕으로 주요 국가와 논의하여 국제표준 확립

- IEA 각료회의('24.2)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주요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작업반*(working group)을 구성

* 참여 국가별 5인 내외 전문가 추천을 받아 공동 작업반 구성·운영

- 우리가 마련한 이행기준(안) 바탕으로 글로벌 이행기준 확립 논의를 조속히 착수 → 연내에 합의안 등 가시적 성과 도출

□ CF연합이 글로벌 무탄소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원년(元年)

* '23.9,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계기, 전세계 누구나 참여가능한 오픈 플랫폼으로 결성('23.10)

- 現 20여개 국내 기업 중심의 CF연합의 외연을 확장하여, 지자체, 협·단체, 해외기업 등으로 참여 주체를 다변화

-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기업 중심, 국내 투자협약(MOU), 준공식 등 주요 행사 계기로 참여를 적극 독려

-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·세미나* 등을 활용하여, 전세계 각국에 CF연합 참여 유치 활동을 전방위 전개

* 국내 : 기후산업국제박람회('24.9), ^{가칭}글로벌 CFE 포럼(CF연합, '24.10)

국외 : WEC총회('24.4, 네덜란드), COP29('24.11, 아제르바이잔)

② 무탄소 에너지원별 공급 역량 강화

◇ 무탄소 에너지원 원전·재생·수소의 공급 역량 확대 및 산업 생태계 확충

□ 원전일감 3.3조원 공급, 원전수주 조기달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 완성

- 신한울 3·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*하고, 보조기기 계약 즉시 선금을 수령**토록 하여 원전기업 현장에서의 온기 확산

* 원전일감 공급 (발주 기준) : ('22) 2.4조원 → ('23) 3.0조원 → ('24) 3.3조원

** (기존) 계약 2~3년 후 납품시 대금지급 → (개선) 계약직후 총계약금 30%이내 선금지급
- 선금 보증수수료도 최대 75%까지 지원, 중소 기자재업체 부담 완화

- 원전 특별금융을 2배로 확대*하여 원전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고, 조특법 세제혜택 대상 확대**를 통해 원전 신기술 투자 촉진,

* 원전 특별금융 : ('23) 0.5조원 → ('24) 1조원

** 원전 분야 핵심 기술을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·확대 반영

-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전 전주기 제도적 기반 완성

- 원전설비 5조원 수주 조기 달성 및 '27년 목표를 10조원으로 상향, 체코·폴란드 등 입찰에 집중하여 대형원전 수출 가시화

□ 시장중심, 중대규모, 계획입지 등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

- 고비용·경쟁 제한적 RPS 제도는 발전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보급기반을 확산하는 방향(경매제도)으로 단계적 전환

- 중대형·산단 중심 태양광 보급 및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, 계획 입지 및 인허가 일괄지원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추진

□ 청정수소 시장 개설, 투자 본격화로 글로벌 수소 선도국 도약

-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개설 및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('24.上), 수소 클러스터 조성* 본격 추진

* '24~'28년 클러스터 조성 : 포항(수소 연료전지, 총 1,918억원), 동해삼척(수소 저장운송, 총 3,177억원)

- 수소 발전, 수전해 등의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규제 확립(총 25건)

- 한·일 등 양·다자 수소협력 강화 및 수소가격 벤치마크 도입 연구

3 무탄소에너지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 및 전력망 확충

◇ 질서있고 조화로운 무탄소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

□ 중장기 무탄소에너지 전력공급 계획 마련

- 「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」 수립(‘24.上)을 통해 에너지공급 안정성, 탄소중립, 효율성, 수용가능성이 조화된 전원믹스 구현

□ 원별(원전, 재생e) 시장제도 신설로 무탄소전원 확충 뒷받침

- 원전 차액계약* 도입으로 低원가 기저전원인 원전 활용도 강화
* 계약기간 중 발전량·고정가격 보장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
- 재생e 가격입찰제도* 적용으로 재생e의 안정적 확산 기반 구축
* 제주지역부터 우선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

□ 유연성 자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강건한 전력시스템 구축

- 양수발전, ESS 등 수익구조를 개선*하여 지속적 건설 기반 조성
* (예시) 보조서비스 특성 반영 용량요금·계약시장 등 제도 확대
- 플러스DR* 단계적 확대(호남 등) 등 수요측면 유연성자원 활성화
* 전력공급 과잉시 사전약정된 참여자가 전력사용을 증대(현재 제주지역 운영 중)

□ 기간망 확충과 전력수요·공급 분산으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제고

- 「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」 제정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, 주민수용성 제고 등 전력망 건설기간 대폭 단축 추진
- 분산에너지특구 지정,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등 전력수요·공급 분산으로 전력망 건설 부담 완화

4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에너지 복지 강화

◇ 효율 혁신을 통한 에너지 수요절감 및 따뜻한 에너지 복지 제공

□ 저탄소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효율혁신 강화

- 국가 에너지 소비의 60%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현장의 선제적·자발적 효율투자 확산을 위한 재정·금융·세제 등 지원 강화
 - *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효율투자 이행 지원 확대 등
-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·저공해 설비 교체, 수요관리 인프라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 가속화
- 고효율 제품 개발·시장보급 확대를 위한 효율관리제도 정비 및 친환경차 전환 추세에 대응한 전기차 효율등급제 본격 시행

□ 에너지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접근성 강화

- 바우처,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사업의 요건,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순화 방안 마련
 - * (예시) 연탄쿠폰, 등유 바우처 등을 에너지 바우처로 일원화 등
- 우편원·검침원·복지협단체 등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도입*, 위기가구 모니터링 및 에너지이용권 사용안내·전달 추진
 - * 에너지공단 사업운영비(44.6억원) 내에서 우정사업본부 복지등기우편서비스, 복지 관련 협단체, 한전MCS 검침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

□ 수혜자 중심의 폭 넓고 촘촘한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

-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확대(34.7→36.7만원) 및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연장(1개월)을 추진*하고, 지원대상 추가 발굴** 검토
 - * '23년: (하절기) 4.3만원, 7.1. ~ 9.30. 사용 / (동절기) 30.4만원, 10.11. ~ 4.30. 사용
'24년: (하절기) 5.3만원, 7.1. ~ 9.30. 사용 / (동절기) 31.4만원, 10. 4. ~ 5.25. 사용
 - ** 기초생활수급가구 범위 내에서 다자녀 가구 등 기후 민감 계층 추가 발굴 검토
-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複數의 에너지원에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에너지원 확대* 추진(현행 1개→ 2개 이상)
 - * (예시) 3종 에너지원 중 택1 → 전기+도시가스 or 전기+지역난방 등 복수 사용 가능
- 취약계층·소상공인 대상 고효율 기기 보급 등 효율개선 지원 확대
 - * (취약계층) '23년 1,241 → '24년 1,392억원, (소상공인) '23년 400 → '24년 1,100억원

5 지역경제 및 투자 활성화 : 구석구석 온기 도는 지방시대

1 지방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

◇ 지방이 원하는 산업, 투자,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

- 14개 지방정부의 65조원 규모* 기업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한 애로해소 지속

* 14개 지방정부-지역 투자기업 간 MOU 체결 등 기업투자 유치(MOU 769건, 약 65조원)

-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(인구감소지역, 접경지역)에 '기회발전 특구'를 신규 지정('24.上)하여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유도

* (지정절차) 지방정부(시·도지사)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및 특구계획 수립 → 산업부에 지정 신청 → 지방시대위 심의·의결 → 산업부 장관이 지정
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(기업당 100→200억원), 비율(입지보조금(중견) 5%p 등) 상향 및 지원요건 완화*로 기업 지방투자 부담 완화

* 내연차 업체의 미래차 전환 등에 연면적 증가·신규고용 등의 요건 탄력적 적용 등

□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

- 미래 모빌리티, SMR 등 지역별로 선정한 미래 신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추진('24년 산업부 관련 25개 과제, 1,047억원)

- 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필요한 초기 현장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'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' 확대*

* ('23, 시범) 10억원/4개社/교육생 80명 → ('24, 본사업) 15억원/10개社/교육생 150명

- 지방시대위와 함께 지방정부의 '24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('24.3), 시·도간 연계협력 산업 발굴·육성

□ 민간수요 중심, 지방 주도로 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개발 촉진

- 경자구역 신규·추가지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지정을 활성화하여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 -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
 - *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개발면적·기간·비용 등 지방정부의 변경권한을 확대(경자법 개정)
-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 수출·투자유치 거점 및 제조·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육성(자유무역지역 제도혁신 전략 마련, '24.上)

2 지역 산업단지 혁신 가속화

◇ 산단을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

□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

- 입지 킬러규제(입주업종, 토지용도, 매매·임대 제한) 개선방안('23.8.24)의 차질없는 이행*과 기업의 신산업 투자장애 발굴 및 신속 지원**
 - * 킬러규제 관련 「산업집적법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'24.1.2) → 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('24.7월)
 - ** (例) 포항 블루밸리 산단 內 이차전지 업종 입주허용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, 폐배터리,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자원순환 신성장 산업의 산단 입주기준 마련
- 지방 일반산단 입주기업의 경영·투자활동 애로사항 발굴·개선
 - * 산업부, 지자체, 산업단지공단, 지방 산단 관리기관 등으로 지방산단협의체 구성·운영

□ 문화·편의·주거시설 확대로 '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'으로 탈바꿈

- 정부자금 마중물과 민간투자 제도정비로 주거, 편의시설 조성에 민간투자 확대
 - * 산단환경개선펀드, ('23) 958 → ('24) 1,868억원 / 복합용지, 토지용도 전환 규제 완화
- 청년복합문화센터, 아름다운 거리, 노후공장 리뉴얼 등 산단혁신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환경개선 효과 극대화
 - * '24년 청년복합문화센터 30개소, 아름다운 거리 28개소, 노후공장 리뉴얼 150개사

□ 디지털·저탄소 전환 가속화로 산단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제조 순주기(기획·설계~판매 등) 디지털화 지원 인프라 확산
 - * (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) 반월, 대구 등 3개, (스마트물류플랫폼) 구미, 광주 등 6개
-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, 인근 재생에너지 단지(태양광, 풍력)와 연계한 PPA(전력구매계약)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화 촉진
 - * (신재생 인프라 및 에너지효율화) '23년 590억원 → '24년 1,060억원
- 산단 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방안* 마련
 - * 생애주기 배출량 측정 플랫폼 구축, 감축수단 지원(인근 신재생 인프라 연계 PPA 등)

6 국민 체감형 업무혁신 : 국민의 불편을 바로 해소

1 관행적 불공정·불합리 해소

◇ 관행적 불공정·불합리 요소를 발굴·제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 향상

□ 기업 투자와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우선 혁파

- ① 수소 신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수전해·충전소·발전 등 핵심 분야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및 규제애로 해소('24.1Q 발표)
- ②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①소비자 편의 확대, ②안전 등 미비점 보완, ③시장진입 걸림돌 제거 추진('24.1Q 발표)
- ③ AI 자율 제조 도입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규제혁신 등 선제적 제도·인프라 정비(연내)

□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통해 국민 쇼핑 편의 증진

- 온라인 중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,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법 개정 추진 → 새벽배송 가능지역 확대
-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평일 전환 관련 제도개선 등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을 통해 소비자 편의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□ 안전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서비스의 질 개선

- 인증 서비스 경쟁 촉진과 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량있는 민간 영리법인이 안전인증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제거
 - *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에서 비영리 삭제, 특수·고가 시험설비는 외부 설비 보유 기관과 계약 체결 허용 등 시험설비 투자부담 완화
- 「KC인증 불편신고센터(23.12월 개소)」를 통해 기업의 인증 애로를 발굴·해소하고 인증기관 부당행위 등 불공정 인증 근절

□ 재생사업자의 위법·부당행위 엄정 조치, 재생에너지 특혜 제도 개편

- 한국형 FIT 농업인 부자격자는 조사완료 후 계약해지 추진(1분기), 전력유관기관의 임직원 및 가족 태양광 사업금지 규정 마련
- 재생e의 계통안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·허가제도 등 개편
 - * 재생e 입찰제도 도입, 계통포화지역 발전사업허가 제한 등
 - 소규모 위주 보급과 편법분할을 유발하는 소규모 우대조치 연내 개편
 - * (기초치) 한국형 FIT 일몰(23.7), 소규모 계통우대 종료(24.1) (향후과제) REC 가중치 개편 등
 - 재생e 보급·용자 지원제도*는 시장성숙을 고려하여 자기부담 상향 및 정부 보조비율 완화
 - * 국무조정실 조사(23.7) 결과, 신재생 용자사업 관련 수천억원 규모의 위법·부적정 집행 확인
 - 적정 발전원가를 초과하는 수익으로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현물 REC 가격 안정화 추진

□ 현장방문에서 원격점검으로 전기안전관리방식 전환하여 국민편익 향상

- 기존 현장방문·대면·주기적 안전점검 방식을 신기술(ICT·IoT 결합) 기반 원격·비대면·상시 안전관리방식*으로 전환 추진
 - * 원격점검장치(누전, 과부하 등 센싱기술)의 안전데이터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, 분석·가공·개방하여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정보 제공(빅데이터, 플랫폼)
 - ** (1단계) 가로등, 신호등 등 도로조명시설 → (2단계) 취약계층 노후시설 → (3단계) 일반주택
- ①국민 편의(즉시 송전, 예산절감)과 ②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중심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온라인 방식*으로 개편
 - * (절차) 시공능력 평가를 거쳐 시공 우수업체를 선정하고, 기술서류, 점검희망일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, 전문직원의 화상검토 후 사용전점검 결과 판정 → 즉시 송전(전기공급)

2 부처간 협업과제 확대

◇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수출, 산업성장에 협력

□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총력 지원

- V 주제 '수출전략회의' 등을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, 기업애로 해소, 품목별·국가별 맞춤형 지원 등 범부처 지원방안 지속 수립
- 다수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**다부처 협업과제*** 발굴 및 지원 추진
* 예) 화장품·의료기기(복지부, 산업부, 식약처), 농수산식품(농식품부, 해수부, 산업부) 등
- 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원스톱 해결
* 예) 산업부-복지부 합동 「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」(22.12월)
- 「범정부 수출확대 전략」(23.2월) 과제를 충실히 이행·점검

□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지원체계 확충 등 기관간 협업 확대

- 「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* 기술개발 로드맵」을 수립하고(24.上)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 민·관 투자 추진(~27년)
* (우주) 발사체 부품, 고해상도 센서, (AI) 전장 인식 알고리즘, 군수 데이터 분석 SW, (유무인) 고에너지 배터리 등, (반도체) 고신뢰 반도체 패키징 등, (로봇) 스마트 구동기 등
- 민간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(항공 엔진*) 투자 및 절충 교역 등을 활용한 민·군 겸용 기술 상업화 촉진 지원
* 「방위산업 발전협의회」(산업장관, 국방장관 공동 주재) 의결을 통해 예타 추진(24.上)
- GCC FTA 타결 등과 연계하여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* 마련(24.上), 「방산 물자 교역 지원센터」 확대 개편** (24.上) 등 수출 지원체계 확충
* 국가별 무기체계 수준 분석 → 방산-산업 협력 연계 「Two-Track 수출 전략」 마련
** 「방산 수출 혁신단(가칭)」 : G2G 방산 수출 기능 강화(▲산업 협력+수출금융, ▲방산+민수기술 등)

□ 산업계 인력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확대

- 조선, 뿌리 등 외국인력(E-9)에 대한 수요 및 애로사항 지속 모니터링, 첨단분야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, 정착 지원방안 등 마련
- 첨단·소부장 특화단지,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클러스터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-교육부-지자체간 인재양성 협업 추진

3 현장에서 직접 문제 해결

◇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「현장 산업부」

□ 3대 부문(설비, R&D, 외투) 투자 확대를 위한 현장 해결형 시스템 구축

- 산업부 장관 주재 현장 소통 채널인 산업투자전략회의*를 신설하여 분기별 기업 투자 계획 점검 및 현장 애로 해결방안 모색
 - * 정부, 기업(10대 핵심 업종별 대표 등), 경제단체(대한상의, 한국경제인협회, 무역협회 등), 연구기관(산업연구원 등)
- 산업부 기동대(기업 투자동향 대응반) + 프로젝트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상시 업종별 투자애로 점검 및 밀착 지원
 - * 산업부 과장급 업종별 담당관으로 지정 → 애로 해소시까지 지속 모니터링·지원, 주기적으로 산업투자전략회의에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
- 설비(대한상의), R&D(산업기술평가원), 외투(Kotra) 등 민관협업 시스템을 통해 기업 현장애로 수시 접수창구 마련 및 신속 회신 시스템* 구축
 - * 매월 현장 소통 계획·실적 점검하고 접수된 투자애로는 15일내 담당관이 직접 회신

□ 민생현장 목소리 청취 및 민관이 함께하는 수출대책 마련

- 정부-수출 유관기관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애로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「수출현장 지원단(장관 주재)」 월 단위 운영
 - * (예시) (1월) 자동차, 반도체, (2월) 이차전지, 조선 등
- 현장 중심의 신속한 애로 해소 및 체감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「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(장관 주재)」 활성화

□ 자국우선주의에 대응, 국내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밀착 지원

- 新무역장벽 확산에 대비, '통상법무 카라반*' 발족 및 '민관합동 무역장벽 협의회'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밀착지원군 역할 강화
 - * 관련업계 순차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규제 준수 등 각종 통상법무상 애로해소 지원

⇒ 부내 「개혁TF*」를 신설하여 업무 쏠분야에 걸친 과감한 혁신 추진

* 장관 주재 국·과장, 실무자 등 다양한 직급 참여 구성

◇ 「개혁TF」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·규제를 타파, 부처 협업, 현장중심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